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[엄윤탁 의원 대표발의]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302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4.

발의의원 : 엄윤탁 의원, 김성택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달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5조, 제7조, 제9조~제11조, 제34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 군을 관할하면서,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

**제3조(군수 등의 책무 등)**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

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,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행계획)**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(이하 본항에서 “사업”이라고 한다)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2.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,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3. 사업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관계기관의 협조)**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홍보 및 교육)**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·보급에 힘쓰며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재정지원 등)** ① 군수는 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지원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# □ 범죄피해자 보호법

**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30.>

**제7조(손실 복구 지원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,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학교법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30.>

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, 입소·퇴소의 기준 및 절차, 위탁운영의 절차,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9조(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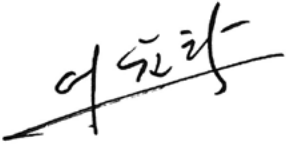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교육·훈련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·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,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·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,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홍보 및 조사연구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,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서 명 날 인 서

| 의 원 명 | 서 명  | 날 인  |
|-------|------|--|
| 엄 윤 탁 | 엄 윤탁 |   |
| 김 성 택 | 김 성택 |  |
|       |      |  |
|       |      |  |
|       |      |  |
|       |      |  |
|       |      |  |